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우리공화당 제1차 경제 정책

우리공화당

최저임금 정상화·5년간 동결!

1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너무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실업자 양산”

곳곳에 보이는 상가임대 · 공장임대 현수막
그곳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잃어버린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9.9%로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기본원칙을 지킨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게**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유류세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국민에게 그 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오르는 법인세율,
우리나라를 떠나는 기업들

2018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55.1%가 세금입니다.
세수가 많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는 유류세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를 폐지하면 국민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 효과는 정부가 유류세를 거두어 지출하는 것보다 큼니다.

법인세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내려도 투자가 늘어날지 모르는 판국에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법인세...
더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3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세 인하!

누가 감당합니까? **결국 국민이 부담합니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사장(死藏)되고 있으며, **한전의 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산산이 깨어진 원자력 전공 청년들의 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원자력 폐기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빼앗는

4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과 고된 노동도 감수하며 일자리를 찾는 동안,
민노총의 자녀들은 그들만의 일자리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지키자, 한미동맹! 이루자,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국방·안보

1 자주 국방력 강화 북핵 완전 폐기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1 4·27 판문점선언 폐기
- 2 9·19 군사합의서 폐기
- 3 북핵 완전 폐기(CVID)

대북굴종적인, 국회의 비준 동의도 거치지 않은 친북 주사파정권의 위험천만한 평화 구상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착각을 주는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폐지한다.

2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 1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지소미아(GSOMIA) 연장
- 2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한반도 배치 추진
-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핵 완전 해결 이후로 연기
- 4 한미연합훈련 복원 및 강화
- 5 사드(THAAD) 추가배치 추진

문제인 주사파정권의 도를 넘은 반미책동과 정책들을 분쇄하고 우리의 안보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주는 군사협력 및 무기 배치의 추진,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고리의 중요 축인 지소미아의 장기간 연장을 통해 무너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구도를 더 강화할 것이다.

외교·남북관계

1 김정은 레짐 체인지 (regime change,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통일 완성

- 1 김정은 레짐 체인지
- 2 북한인권법의 정상화, 그에 입각해
관련 북한인권재단 및 조직들의 정상 운영 추진
- 3 탈북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 자유민주주의통일의 지도자 세력으로 육성
- 4 개별 금강산 관광 추진 정책 중단, 개성공단 폐쇄 유지

반인륜적인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권력의 연장에 협력하는 현 문제인 친북주사파정권의 종북적인 정책들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방과의 안보 협력의 고리를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2 반공 자유인권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대만 독립노선 지지

- 1 중국의 3불(不)정책 반대, 폐기
- 2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대만 독립노선 지지
- 3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정책 반대
- 4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준수

국제사회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열기에 적극 동참하고, 패권적 질서를 형성하려 하는 중국 공산당의 연대 구축 구상에 반대하는 외교노선을 정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이념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한다.